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음 1월 16일) 제150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교육청, '자림학교 학급 감축 인한 학생 재배정' 일방 통보

장애아동 학부모 '뿔났다'

자림학교 감축 내용

초·중 1학년 각각 1학급
고교 1학년 2학급 재배정
15학급에서 11학급으로

학부모 입장 · 감축 따른 문제점

"환경변화 민감한 장애아
특성 고려하지 않아 문제"
이미 합격된 교원 임용 제동

전북도교육청의 탁상 행정과 일방 독주에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개학을 불과 1주일을 앞둔 시점에서 학급을 감축, 장애학생들의 타 학교 재배정을 일방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림복지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로 관련 법에 의거해 학급감축으로 인한 학생 재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19일 자림학교에 내려 보냈다.

학급 감축은 총 4학급(초·중1학년 각 1학급과 고등1학년 2학급)으로 재배정 대상학생은 25명이다.

이에 따라 총 15학급(초6, 중3, 고6)으로 구성된 자림학교는 이번 감축안에 따라 11학급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문을 받은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다.

장애아동의 특수성도 모른 체 사전 협의조차 없이 현장목소리도 듣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고1 신입생인 윤모(발달장애1급) 학생의 학부모(학부모대표)는 이날 자림학교 회의실에서 관련 학부모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학교 재배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불과 1주일 앞두고 통보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연과 배경이 궁금하다"며 "장애 아이들은 학교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앞으로 1주일 동안 어디 가서 배치를 받아야 하는지 앞이 캄캄하다"고 분개했다.

장애 아이들의 경우는 일반 아이들과 달리 학교와 커리큘럼, 교사 선정과 배치, 학교버스 노선, 등하교 차량 탑승시간 등 최소 1~2개월 전부터 학부모의 세심한 상담과 협의가 필요하다.

한 학부모는 "중1, 고1은 신입생이 아니다. 일단 초등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학교로, 다시 고등학교로 연계되는 상황"이라며 "학교 재배정을 하려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단계를 거쳐서 사전조사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학급감축과 학생 재배정문제에 대해 "재학생은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배치를 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교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산 배치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비난의 화살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김승환 교육감에게 오롯이 쏟아졌다.

일방적으로 급박한 학급감축과 학생 재배정의 법적 근거는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기에 궁색할 따름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의 경우 행정 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현재 자림학교 신입생들의 긴급 재배정은 해당 사안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한결 같은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행정예고 기간이 법적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기돼 있는 데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조항의 경우는 변경 신청시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학부모대표는 "사석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고려하는 김 교육감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데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망연자실했다.

도교육청의 학급감축 배정은 자림학교 교사 임용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와 협의 후 신규교사 임용절차를 실시해 일부 교사에게는 이미 합격 통지서까지 내보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임 기간제 교사 3명과 연장계약 교사 1명 등 총 4명의 교사들은 해고가 불가피해 향후 법적 소송도 관측되고 있다.

한편 관련 학부모들은 23일 오전 김 교육감과의 면담을 위해 도교육청을 방문할 계획이다. /고민형 기자

도, 오늘 국가예산 확보 위한 시군 회의 개최

전북도가 도정 당면 현안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4개 시·군과 협업과 공조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23일 오전 전북도 최훈 기획관리실장과 도내 14개 시·군의 기획실장이 참석해 '2016년 도-시군 기획실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계속사업 조정 등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전략적 공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4월 총선으로 정치권이 재정비 되므로 부처 예산편성기간인 6월까지 정치권과의 공조가 힘든 상황임이 각 시군에 전달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201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에 있어 지금이 사전 방문 설명의 적기임을 각 시군이 인식하고 도와 시군의 공동 방문 활동의 필요성이 언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정월대보름인 22일 오후 어느 바닷가에서 묵은 액을 씻고 한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달집태우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강술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혁신도시 금융허브도시 조성 '첫걸음'

도-LH공사, 금융타운 계약 체결

157억 투입 3만6453㎡ 매입
금융기관 사무시설 조성 목적
내달 재원조달 등 용역 발주

22일 오후 3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LH공사 김경기 전북지역본부장 등 관련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첫 단계인 LH공사와의 금융타운 조성부지 매입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전북도와 한국토지공사가 전북 혁신도시 내 금융타운 조성부지에 대한 매입계약 체결을 완료해 금융허브도시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22일 도는 157억원을 투입해 국민연금공단 본부 인근에 금융타운 조성부지 3만6,453㎡(1만1,000여평)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가 매입한 부지는 전북혁신도시가 서울,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이 지역에는 관련 금융기관들의 사무시설 조성 등을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으로 최대 5,534억원의 투자와 최대 3,522억원의 GRDP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과 전북 특화금융산업 발전방안 정책입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도는 '2016년 도정운영방향'에서 전북도 10대 핵심프로젝트로서 '연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을 선정해 관련 업무수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3월께 부지 배치계획과 재원조달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올해 6월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타당성조사에 대한 계획을 세워둔 상태이다.

또한 도는 기금운용본부의 완공은 늦어도 올해 11월을 목표로 하며 금융타운 조성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상반기에 시작해 내년 하반기나 늦어도 2018년에는 금융타운 착공에 들어가는 등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법으로 위치까지 지정해 놓은 만큼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타운 조성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금융타운 조성부지 매입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완전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전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구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기금운용본부 및 관련 금융기관들의 현장목소리를 듣고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수시로 접촉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북도 금융산업 발전협의회', '기금운용본부 이전지원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 정기적인 대화의 창구를 개설하기도 했다. /정영수 기자